

민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민형배·김문수 등 ‘검찰개혁법’ 발의
수사-기소권 분리 담은 4개 법안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구성도
조국혁신당 “즉각 법안 심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민주당 민형배·김문수·김용민·장경태·강준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려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 등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나란히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



민형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혁신 “다음주 초 특검 임명 가능성”

文 정부 검찰 출신 등 다수 거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는 만큼 양당도 11일 실무 절차를 밟 빠르게 진행하며 보수를 맞추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의뢰하면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복수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연수원 26기) 중앙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56·연수원 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출신인 김양수(57·연수원 29기) 삼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한동수(59·연수원 24기)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장·차관 국민추천 첫날 1만1천건 …법무부 장관 최다”

대통령실, 16일까지 접수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하고 “새 정부의 과

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참여해 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1주일 동안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이여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차림회) 소속이다.

민형배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 저희 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 화답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우리 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 이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 완수에 나설 차례”라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 하자”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관세 협상 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가성비 대통령 시계 제작… 기대하셔도 좋다”

李 “비용 대비 효과 뛰어나다는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

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자 직접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 의만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라

軍, 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중지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군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실현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재개 1년 만에 중지된 것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